

예산 · 재정 정책연구 동향

「2023-제6호(Vol. 29호)」

본 자료는 2023. 12. 15.까지의 국내외 주요 동향을 요약·수록한 자료로,
‘바로가기’를 누르면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분 야 별 목 차		
분 야	제 목	자료 출처
1. 경제분야 (p1)	• KDI 경제동향 12월	한국개발연구원
	• 일본 유바리시 파산경험이 강원도에 주는 교훈	강원연구원
2. 재정분야 (p2)	• 월간 재정동향 2023년 12월호	기획재정부
	• 2023회계연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비비 현황 분석	나라살림연구소
3. 재정·예산 관련 법령 (p3)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법제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법제처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제처
4. 정책 및 연구 (p4)	• 강원도 청년은 돈보다 여유와 자율적 직장을 원한다	강원연구원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 및 향후 과제: 지방교부세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5. 뉴스브리핑 (p5~6)	•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으로 효율성은 쑥 높이고 비용은 확 줄인다	행정안전부
	•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 지원한다	교육부
	• 지역자원 활용한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6건 선정	국토교통부
	• 국방부-경기도, 지역 현장 공동방문을 통한 현안 해결 모색	국방부
	• 농촌 빈집 정비 제도 개선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1. 경제

출처

■ 2023년 12월 KDI 경제동향

(내용 요약) [바로가기](#)

한국개발연구원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서서히 완화되는 모습

- 고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소비와 설비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물가상승세는 점진적으로 안정되는 모습
 - 상품소비가 부진하고 서비스 소비 증가세도 둔화됨
 - 고금리 지속으로 투자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반도체 재고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설비투자는 감소세를 나타냄
 - 이와 같은 내수 부진이 반영되면서 물가상승세도 둔화 흐름을 보임
- 그러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경기 부진 완화를 주도하고 있음
 - 최신 스마트폰과 AI 서버 제품의 수요 확대로 반도체 수출이 증가로 전환
 - 아울러, 수출기업의 심리지수도 점차 개선되고 있음

■ 일본 유바리시 파산경험이 강원도에 주는 교훈

(내용 요약) [바로가기](#)

강원연구원

-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유바리시는 인구 6천여 명의 작은 도시임. 2006년 6월 20일 이 작은 도시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음. 지역파산을 신청했기 때문. 개인이나 기업파산은 들어봤어도 지역파산은 생소. 지방자치단체가 빚을 너무 많이 져서 도저히 갚을 길이 없자 파산을 신청. 공공행정은 망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깨짐.
- 파산의 조짐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음. 1965년부터 30년간 유바리시의 총부채는 584억 엔까지 상승. 파산직전인 2005년 주민 1인당 지방채 부담액은 유사규모 지자체의 3배에 달함. 도시의 쇠퇴를 막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였으나 무리한 투자로 인하여 지역파산을 선언한 것.
- 그 후유증은 컸음. 공무원은 1/3수준으로, 시의원은 절반으로 줄어듦. 봉급도 줄고 심지어 시의원 임기도 반으로 줄어듦. 40개에 달했던 초·중·고교는 각각 1개교씩만 남았으며 지방세 등이 모두 인상되어 세금부담이 가장 큰 지역이 됨. 공공시설도 운영중지, 통폐합되었음. 당연히 인구감소가 뒤따랐음. 석탄산업 전성기인 1965년 117,000명이었던 인구는 2005년 13,000명으로, 2023년 6,500명 수준으로 감소. 단기간 가장 많은 인구가 감소한 1위 지역이 됨.

2. 재정

출처

■ 월간 재정동향 12월호

(내용 요약) [바로가기](#)

기획재정부

- '23.10월 말 누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45.2조 원 감소한 492.5조 원, 총지출은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77.8조 원 감소한 502.9조 원
- 통합재정수지는 10.4조 원 적자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1.8조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2.2조 원 적자이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32.6조 원, 34.1조 원 개선된 수치이며, 전월 대비로도 각각 20.7조 원, 18.4조 원 개선됨
- 한편, 10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1,105.5조 원으로 전월 대비 5.9조 원 증가하였다. 이는 월별 국고채 발행·상환 계획에 따라 등락한 결과임

■ 2023회계연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비비 현황 분석

(내용 요약) [바로가기](#)

나라살림연구소

- 지방재정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비비 규모를 각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함
- 2023년 8월 31일 기준 예산 총액 대비 예비비 집행잔액을 분석한 결과
 -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431조 원, 일반예비비 집행잔액은 1.6조 원, 재난예비비 집행잔액은 1.6조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60조 원, 일반예비비 집행잔액은 6,338억 원, 재난예비비 집행잔액은 489억 원임. 3.9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 특별한 지출 계획이 없는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음.
 - 일반회계 예산총액 대비 일반회계에 편성된 일반예비비 집행잔액이 1%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1곳, 특별회계 예산총액 대비 특별회계에 편성된 일반예비비 집행잔액이 1%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47곳임. 즉 4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법한 규모의 재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음.
 - 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회계에 편성된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 집행잔액이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를 초과하며,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회계에 편성된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 집행잔액이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를 초과함. 이는 법에 위배되지 않으나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예비비 편성은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함
- 지출 계획이 없는 특별회계 자금의 예수 예탁 운용이 가능하게 하여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별도의 특별회계의 필요 여부를 엄밀히 고려하여 필요하지 않은 경우 정비 및 폐지함으로써 회계를 단순화하여야 함. 또한 예산총액 대비 큰 규모의 예비비 편성이 불가피하다면 적법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관련 재정 운용 관행, 제도 등을 개선하여야 함

3. 재정·예산 관련 법령

출처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개정 '23.4.11 시행 '24.1.1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바로가기](#)

법제처

- 주민의 정보 접근성 강화 및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일반조정교부금의 세부명세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대한 정보까지 공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투자심사 실시주체와 투자심사 제외 대상에 관한 내용을 하위법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타당성조사의 중복 실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외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방식으로 제안된 사업으로서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등은 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개정 '23.11.21. 시행 '23.11.2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바로가기](#)

법제처

- 교육 및 돌봄과 관련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를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하고, 학교 단위에서 맞춤형 교육과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3865호, 2023.11.16.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을 정하는 한편,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 중 교육복지지원비의 측정단위,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개정 '23.12.12. 시행 '23.12.2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바로가기](#)

법제처

-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한편,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이 제대로 추진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503호, 2023. 6. 20. 공포, 12. 21. 시행)됨에 따라, 도시형소공인 지원사업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등을 종합계획의 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과 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에는 사업의 개요,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4. 정책 및 연구

출처

■ 강원도 청년은 돈보다 여유와 자율적 직장을 원한다

(내용 요약) [바로가기](#)

강원연구원

- 젊어서 몰두한 일이 대개 그 사람의 알맹이가 된다. 직업은 그저 일자리에 그치지 않고 가치관과 태도, 사회경제적 지위, 능력 개발과 성취의 기회, 가족과의 관계와 가정 내 지위 등 개인 삶의 모든 영역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취업에 연속하여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청년 개인의 삶에는 큰 흔적이 남는다.
- 청년층 취업난은 여러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청년층의 고용률은 46.4%로 60대 고용률보다 낮은 수준이다. 1년 이상 장기 미취업청년의 비중이 45.4%에 달하고 첫 취업까지 평균 10.4개월이 소요되지만 첫 직장의 평균 근속기간은 1년 7개월 수준이다.
- 강원도 청년층은 경제적 보상, 성취, 직업적 안정보다 심신의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직업을 선호했다. 청년층의 과반수가 공개채용을 통해 취업하고 자격증과 학점, 학벌이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가 기대에 미치지 않거나 근무 환경이 맞지 않아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진로선택의 주도성은 높으나 진로에 대한 불안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세대공감형 직장문화 확산, 지역기업의 양질의 일자리 확충, 청년 대상 직업 훈련 제도의 고도화 및 접근성 제고, 진로직업 상담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 및 향후 과제: 지방교부세를 중심으로

(내용 요약) [바로가기](#)

국회입법조사처

- 자체수입을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강화해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이 확보되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가능하므로 지방세를 근간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합리적임
- 하지만, 전체 조세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고 지역 간 재정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분을 보전하고 재정격차를 형평화할 지방재정 조정제도가 필요함
- 지방재정조정제도 중에서 지방교부세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전하는 기능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격차를 형평화하는 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대표적인 지방재정조정 제도라는 의의가 있음

5. 뉴스브리핑

출처

■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으로 효율성은 쑥 높이고 비용은 확 줄인다

(내용요약)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 구조개혁 평가 우수지자체 20곳 선정(광역 8, 기초 12)하여 총 100억 원 특별교부세 지원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국정과제 15 :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지방공공기관 혁신 구조개혁은 기관 통폐합·협업 등 유사·중복 기능조정과 민간위탁 등 민간경합사업 정비로 구성되며 현재 106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89)에서 혁신을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구조개혁의 성과가 높은 우수지자체 20곳을 선정하고 총 10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광역부문 장려 지자체로 선정된 강원특별자치도는 4억 5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 지원한다

(내용요약) [바로가기](#)

교육부

-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준 중위소득 상향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이 교육급여 신청 가능
- 2024년에는 교육급여를 2023년 대비 약 11% 인상하여 연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 지원

교육부는 12월 4일(월)부터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된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다.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되면서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구별 소득액이 ▲2인 가구 184만1305원 ▲3인 가구 235만 7329원 ▲4인 가구 286만4957원 ▲5인 가구 334만7868원 ▲6인 가구 380만9185원 이하일 경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5. 뉴스브리핑

출처

■ 지역자원 활용한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6건 선정

(내용요약)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 지역에 활력을 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개발 우수사례 발굴·전파

국토교통부는 12월 8일(금) 전국 지자체에서 수행 중인 지역개발사업* 사례를 공유하고 개발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6건을 최종 선정하였다.

*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

올해 경진대회는 관광 2개 분야(지역개발공모, 지역개발계획), 산업·주거복지 1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분야별로 최우수사례 1건과 우수사례 1건 총 6건을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6개 지자체는 '24년도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공모 시 서면심사 면제(최우수), 가점 부여(우수) 등 혜택을 받게 된다.

* 지역주민 생활불편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소규모의 생활편의시설 지원

■ 국방부-경기도, 지역 현장 공동방문을 통한 현안 해결 모색

(내용요약) [바로가기](#)

국방부

- '국방부-경기도 상생협의체', 군과 지자체 간 현안 해결을 위해 가평군 공동방문
- 향후 공동 현장방문 정례화를 통해 민군 상생 및 현장과의 소통 노력 지속 추진

'국방부-경기도 상생협의체'는 12월 12일 경기도 가평군을 공동방문하여 군과 지자체 간 현안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였다.

'국방부-경기도 상생협의체'는 올해 6월에 출범한 양 기관 간 국장급 협의체로서, 연 2회 정기적인 회의(현장방문)를 통해 경기도 내 주요 군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농촌 빈집 정비 제도 개선됩니다

(내용요약) [바로가기](#)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정비법 개정안(빈집 정비 특례, 이행강제금 신설 등) 국회통과(12.8.)

농림축산식품부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농촌 빈집은 지자체가 직권철거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는데 유인책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농식품부에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빈집정비를 위해서는 소유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유인책과 불이익을 동시에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빈집 철거시 재산세 부담 완화 등도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빈집정비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